



한국 유기농업의 발자취와 미래

김종숙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 한국농수산대학 교수

1. 서론

한국의 유기농업은 1970년대 농민들로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 중반 사회운동의 성격을 띠면서 서서히 확산되어 오다 1990년대 후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이 수립되면서 급속하게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유기농업의 개념은 초기에는 현재와 같은 엄밀한 의미보다는 생명을 죽이는 농약에 대해서 가능한 배제하고 최소화한다는 광의의 의미가 통용되었으나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확대되고 인증제도가 확립되면서 국제기준인 코덱스기준에 준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따른 유기농산물의 비중은 약 1% 수준이나 유기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

한국의 유기농업은 생산자로부터 시작된 특성으로 인하여 유통 및 소비가 애로가 되어 왔으며 국가의 유기농업 육성정책은 생산으로부터 유통 소비정책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또한 유기농업은 농업의 생산기술로서의 농법에 그치지 않고 사회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념적인 내용을 내포하면서 발전 되어왔다. 생명사상에 바탕을 둔 생명농업, 공동체 의식, 식량자급의 의미가 환경문제와 연결되어 유기농업이 해석되고 의미부여가 되었다. 사회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유기농업은 먹거리의 안전성만이 아니라 환경 생태계 파괴를 막는 대안으로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온 것이다.

유기농업은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면서도 한편 지속적으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농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부터 화학비료 사용에 대한 논란, 그리고 최근에는 유기농업이 오히려 더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유기농업이 흠을 살리고 수질을 정화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농업이라는 인식의 저편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 상존하는 인식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많은 사례를 만들고 데이터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개발이 과제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중앙정부의 육성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농업 활성화 일환으로 유기농업이 육성 보급되고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의 선구적인 유형을 만들어가면서 유기농업은 지역개발의 토대가 되고 있다.

유기농업에 공감하는 생산자 농민, 도시소비자의 교류, 생협 활동, 학교급식 등을 토대로 유

기농업이 금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해감으로써 사회전반을 유기농업의 패러다임으로 바꾸어 나갈 시점에 와 있다.

2. 유기농업의 발전 유형별 개요

한국의 유기농업은 1970년대 중반에 국내에 소개되면서 생명을 중시하는 농민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1976년 농약과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관행농업을 죽임의 농업으로 보고 생명농업으로서 유기농업을 실천하고자 한 정농회의 성립에 이어 1978년 유기, 자연농업연구회 등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단체가 조직되면서 농촌 현장의 농민으로부터 유기농업이 서서히 확산되었다.

이글에서는 1980년대 이후 유기농업운동을 생명농업 운동, 협동조합 도농교류 직거래운동, 식품안전성 확보 운동, 지역공동체 농업운동으로 구분하여 발전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의 자각으로 출발한 유기농업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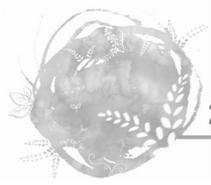
: 생명농업운동

한국은 19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개발과정을 거치면서 공업위주의 근대화 과정을 통해 농업분야는 값싼 노동력을 위해서 농산물의 저가격이 강제되었고 농민들의 도시 이농은 농촌의 피해를 가져왔다. 농산물의 저가격을 보상하기 위한 수량위주의 생산은 농민들이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하는 화학농업으로 치닫게 되었고 그 결과 농촌환경은 오염되고 농민들의 건강과 농산물의 안전성은 악화되어 갔다.

근대화된 농업이 생명을 죽이는 농법이었음을 자각한 것은 정치가들이나 농업행정당국, 그리고 농학자들도 아닌 농민들 자신이었다. 소수의 선각적 농민들이 화학비료와 농약에 의존해 온 농업이 인간중심의 농업방식이었음을 깨닫고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을 통하여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초기 유기농업을 실천하기 시작한 농민들 중에는 농약중독을 직접 경험한 농민들이 많았다. 그리고 봄마다 찾아오던 제비가 더 이상 처마 밑에 집을 짓지 않고 개울에는 송사리 떼 지어 노는 모습도, 반딧불이도 사라진 농촌에서 농민들은 수량을 높이고 노동력을 줄이고자 했던 농업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켜 생명을 죽이는 농업이었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생명을 살리고 환경을 보전하는 농업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자연과 하나 되는 농민의 의무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들은 유기농업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농업이고 보전하는 농업으로 인식하였다. 유기농업을 실천하는데 있어 보다 본질적으로는 생태계의 생명들을 살리는



농법으로 전환하는 농민들의 자세가 요구되고 또한 유기농산물의 유통이 시장경제 시스템에 편입되지 않고 소비자와의 교류를 통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1990년 이후 점차 유기농산물의 시장수요가 늘어나고 상품화되어 가면서 유기농업을 소득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농법 또는 기술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농민들이 늘어가게 되었다. 농협의 ‘흙살리기 운동’을 비롯한 지역 농업인 단체의 유기농업 실천운동은 유기농업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다.

2) 도시소비자와 생산자의 유기적 공동체 직거래운동

: 유통을 통한 농촌살리기 운동, 새로운 협동조합운동

1982년경부터 원주에서 신협과 농협을 중심으로 유기농업이 시작되고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해 줄 도시소비자와 직거래를 시작하면서 농촌과 도시가 연계된 운동으로 한살림이 알려지게 되었다. 1986년 서울에 한살림이 세워지면서 유기농산물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이 농업을 존속시킬 수 있으며 농업이 존속됨으로써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상적 토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사상적 토대는 1973년 원주지역에서 추진했던 강원도 농촌개발운동의 경험이 있었다. 농촌공동체를 기반으로 생산협동, 신용협동, 농기계 공동이용, 생활물자 공동구입 등 협동운동을 통해서 농촌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업중심의 경제정책과 급격한 도시화 등으로 농촌의 공동체적 삶이 붕괴되면서 농업이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생명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을 하게 되었다.

「한살림농산」이 설립된 후 전통두레, 종교 공동체, 생활협동운동, 협동조합운동, 녹색운동의 생태공동체 등 다양한 공동체운동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1989년 「한살림모임」을 창립하면서 「한살림선언」을 하게 된다.

한살림운동은 생명사상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정립하고, 협동과 공유와 나눔, 자연과의 호혜적 연관을 토대로 한 협조와 화합을 통해 삶의 양식을 만들어나가는 적극적 운동으로 방향을 설정하였다. 생명운동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삶의 양식은 근대화과정에서 잃어버린 공동체의 생명력, 즉 공동체성의 회복이었다. 생명이 지니는 관계성, 유기적 연관성에 대한 자각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 연대를 통한 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 구체적인 일상의 ‘밥’을 실천의 매개로 삼은 생활협동운동을 초창기 대표적인 실천프로그램으로 삼았다. 생명운동은 환경·생태 문제에 대한 모색, 즉 인간과 자연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 회복, 인간과 자기 자신과의 내면적 관계 회복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문명운

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동과 연대를 통한 유기농산물 직거래운동은 이후 생명농업운동을 전개하는 종교단체, 환경단체, 소비자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생활협동조합방식을 채택하는 모델이 되었다.

3) 식품안전성 보장정책으로서 유기농업

1980년대 후반부터 수입농산물의 잔류농약 문제가 사회문제로 되면서 소비자들이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유기적 생명체의 연관을 기본으로 하는 유기농업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아울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수입지몽(그레이프후르츠)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잔류농약이 다량 검출되면서 소비자단체들은 우리 식탁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조사를 하기 시작하였고 수입농산물의 수확후처리 과정에서의 농약 살포(포스트하베스트)에 대한 문제점은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소비자단체들이 안전농산물 소비를 위해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회원들에게 유기농산물 홍보교육과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 유기농산물을 판매하도록 촉구하기도 하였다.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요구는 정부의 농산물품질관리 정책을 확대 정비하여 원산지 표시제도, 품질인증제도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정부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가 실시되면서 유통업체에서는 차별화 농산물로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코너를 별도로 설치하고 유기농산물을 비롯한 친환경 안전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전문점도 등장하여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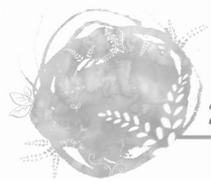
4) 지역농업공동체 운동의 생명농업

: 농촌을 베이스로 한 융복합 결합운동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지역주민들의 민주적이고 자치적인 훈련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면서 지역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지역농업은 중앙행정 중심의 농업과 달리 지역 내에서 먹을거리와 폐기물의 순환을 기본으로 하는 생태적 경제의 근간을 만드는 쪽으로 농업의 체계를 재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농사기술에 있어서도 지역에 있는 자원(생물적, 비생물적)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내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하여 물질적 정신적 교류관계를 맺음으로써 농업을 토대로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형성해가려고 한다.

유기농업으로 경작된 지역내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자 농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유통을 통해 지역내에서 소비하는 것을 지향한다. 여기에 지역내에서 폐기되는 유기물질을 생산에 재투입하는 생태순환농업,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산물 가공, 도시인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린투어리즘, 그리고 소비자와 연대를 통한 직거래 등이 통합적으로 결합되는 것으로 지역농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안운동으로서 지역농업은 유기축산에 대한 관심으로 더욱 촉발되고 있다.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퇴비를 공장형 축산의 축분은 사용할 수 없다는 codex규정에 따라 유기축산을 도입하는 지역에서는 지역농업의 통합적 시스템 형성에 더욱 근접해 가고 있으며 홍성지역, 원주, 아산지역 등 생명농업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 지역공동체 운동의 유형별 사례

<표1> 지역공동체 사례지역의 특성

구분	지역범위	중심주체	구심점	생산방식	유통방식
장성한마음공동체	리(마을)	생산자소비자공동체	교회	경종 중심	회원 직거래
풀무지역공동체	홍동면	생산자단체	학교	유기경종과 유기축산 연계	수도권생협
아산생산자연협회	아산시	생산자단체	지역리더	유기경종과 유기축산 연계	지역내생협유통
팔당생명살림	상수원보호구역인접 군 면	생산자단체	지역리더	채소류중심	지역내생협매장운영, 수도권생협 및 일반유통

3. 친환경농업 정책의 전개과정

1970년대 중반부터 선각자적인 농민들에 의해서 전개된 유기농업을 정부정책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UR이후 시장개방체제하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90년에 농림부 내에 유기농업발전기획단을 구성하면서부터이다. 당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에 대하여 감수를 염려한 나머지 농약과 화학비료를 최소한으로 억제한 농업이라는 개념정의로 시작하여 이후 유기농업과 저투입농업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개념으로서 환경농업이 되었다가 다시 환경을 보다 강조한 개념으로 현재의 친환경농업이라는 포괄적인 명칭이 부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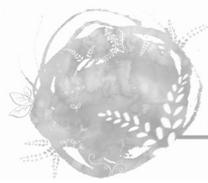
환경농업육성법을 비롯한 육성정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에는 리더들의 역할이 컸다. 현장에서 활발히 전개되어 온 생명농업운동을 우리 농업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채택하고 지원했던 리더들이 정책결정과정의 핵심에 있었다. 또한 친환경농업정책의 발전에는 생명농업운동을 해온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지대하였다. 1995년에 성립한 환경농업단체연합회(당시는 환경보전형농업 생산자 소비자 단체로 칭함)는 생명농업운동의 이념과

현장의 요구를 정부시책에 반영하고자 정책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거버넌스)을 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림부는 1995년에 환경농업과를 설치하고 UR이후 대응책으로 중소농의 소득보전을 위해 환경보전형농업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96년 7월에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을 수립하여 환경농업육성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였고 1997년 12월에는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었다. 1998년 11월에는 친환경농업의 원년선포와 함께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을 발표하였으며 1999년에는 친환경농업육성계획, 2004년에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중장기종합대책으로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산물 안전성 확보대책을 수립하였다. 2001년 친환경농산물 의무인증제가 실시되고 인증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도가 실시되면서 친환경농업은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 (상수원보호구역 대상의 부분적인 직접지불제도는 1999년부터 실시)

한국에서 친환경농업은 기술체계에 따른 영농유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서는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유도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으로 친환경농업을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농약안전사용기준과 작물별 표준소비량을 준수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병해충종합관리, 작물양분종합관리, 천적과 생물학적 방제기술의 이용, 윤작 등을 이용하여 농업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하고,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에 따라 유기농산물, 전환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및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하였다. 전환기유기농산물은 독자로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대신 유기농산물로 통합하여 표기의 내용에 전환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저농약농산물은 2010년부터 신규인증은 제외하는 것으로 개편되어 친환경농산물이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로 순화되는 과정에 있다.

또한 유기농산물 생산 증가에 따른 가공품 생산의 필요성과 수입 가공식품의 유통증가에 따라 유기가공품 인증에 대한 제도정비가 논의되고 있다. 그간 유기가공식품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되는 것과 식품의약품의 표시에 의한 것으로 이원화되어 왔으나 점차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친환경축산물의 경우는 무항생제 축산과 유기축산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고 유기수산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유기농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관행농업에 비해 유기농업은 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농촌진흥청에 유기농업과가 설치되고 대학 등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설치되는 등 기술개발과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업 보급으로 초기에 비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기인증농가의 평균 경영면적은 2000년에 0.8ha에서 2008년에는 1.4ha로 확대되어 기술발달에 따른 규모화 추세를 알 수 있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는 지역농업의 비전을 생명농업으로 정하고 생명식품산업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서 친환경농업 실천면적이 58.2%로 가장 높으며 경지면적 대비에서도 32.5%로 가장 높다. 시군별로도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 따라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울진친환경농업 엑스포 개최를 비롯한 특성화된 지역농업으로서 유기농업을 접근하고 있다.

이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과 민간의 생명농업운동의 성과로 2009년 현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농가수를 인증실적 자료로 보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도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국내생산 인증실적을 보면, 농가수는 2000년 2,448호에서 2009년 198,891호로 증가, 인증면적은 2000년 2,039ha에서 2009년 201,688ha로 증가, 인증량은 2000년 35,406톤에서 2,357,774톤으로 증가하였다<표2>.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은 면적으로 보았을 때 전체의 11.6%이고 그중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전체면적의 0.8%로 나타났다.

<표2>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변화추이

단위: 호, ha, 톤,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비중
유기	농가수(호)	353	5,403	7,167	7,507	8,460	9,403	0.8
	면적(ha)	296	6,095	8,559	9,729	12,033	13,343	0.8
	출하량(톤)	6,538	68,091	95,405	107,179	114,649	108,810	0.6
무농약	농가수(호)	1,060	15,278	21,656	31,540	45,089	63,653	5.3
	면적(ha)	876	13,803	18,066	27,288	42,938	71,039	4.1
	출하량(톤)	15,694	242,068	320,309	443,989	554,592	879,930	4.9
저농약	농가수(호)	1,035	32,797	50,812	92,413	119,004	125,835	10.5
	면적(ha)	867	29,909	48,371	85,865	119,136	117,306	6.8
	출하량(톤)	13,174	487,588	712,380	1,234,706	1,519,070	1,369,034	7.6
계	농가수(호)	2,448	53,478	79,635	131,460	172,553	198,891	16.6
	면적(ha)	2,039	49,807	74,995	122,882	174,107	201,688	11.6
	출하량(톤)	35,406	797,747	1,128,093	1,785,874	2,188,311	2,357,774	13.1

주: 1) 전환기유기농산물 인증실적은 유기농산물에 포함시켜 제시함.
 2) 전체 비중은 2009년 우리나라 전체 농가수, 경지면적, 생산량 대비 비중임. 생산량은 식량, 채소, 과일, 유지, 인삼, 버섯 생산량 합계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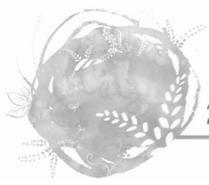
4. 평가와 과제

중앙정부가 추진해 온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은 크게 4가지로 첫째, 친환경농업육성법으로 대표되는 법제화를 통해서 한국농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을 국가가 인증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수단을 마련하였다. 둘째, 담당부서로 친환경농업과를 신설하고 확대 개편하여 정책의 중요도를 부여하였다. 셋째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서 자재, 시설, 수매자금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감소분에 대하여 직접지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넷째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를 도모하였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육성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명문화하였고 이에 따라 제1차(2001-2005), 2차 육성계획(2006-2010)을 거쳐 3차 육성계획(2011-2015)을 수립하고 있다. 1차계획은 생산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2차계획은 확대된 생산에 의해 증가한 공급량을 소비촉진하기 위한 유통정책을 강화하였다. 3차계획에서는 보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확대된 유기식품 산업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초기의 생명농업운동의 성격은 자립적 운동체의 기반을 정비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규모화 조직화 집적화 복합화(클러스터)되었다. 생산기반은 지역공동체운동의 확대발전으로 사업체로서 성장하였고 관련산업과 관련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업의 유형 : 녹색농촌관광마을 지역,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 유기농산물 생산유통 전문경영조직체 등) 친환경농업 선진지역과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결합하여 친환경농업마을조성사업, 광역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친환경농업특구사업, 친환경유기식품클러스터 등의 사업으로 확장시켜가고 있다.

3차 5개년 육성계획에서는 학교급식 등 지속적인 소비기반을 확보해가는 한편 유기식품산업을 발전시켜 강한 농업의 한 축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다. 단, 기술적인 점에서 수도작은 점진적으로 유기농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여타 작물에 대해서는 저농약 수준에서 어떻게 유기농업 단계로 발전해 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며 투입재 위주의 고비용 유기농업을 어떻게 저비용으로 전환해 갈 것인지 기술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한편 유기농업이 관행농업보다 환경오염을 더 시킬 수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 왔다. 환경오염으로부터의 자성에서 시작된 유기농업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킨다는 논란은 유기농업을 둘러싼 논란 중 수확량의 감소와 식량문제의 관계만큼 오래된 논란이다. 그중 몇 가지를 보면 농약을 살포하지 않으면 식물체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독소를 발생시켜 오히려 농약 방제한 것보다 해롭다는 것, 오리농법을 계속 실시할 경우 질산염의 과다 축적으로 토양, 수질이 오염된다는 것, 유기질 퇴비를 사용하므로 (강우시) 호수, 하천



등을 오염시킨다는 것 등이다. 이는 농약의 잔류 문제, 농약살포시의 농민의 중독 문제,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은 물론 고려가 되지 않은 것이며, 식품의 안전성 역시 별레 먹은 부위가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도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며, 오리농법의 질산염 문제는 오리 투입 마리 수 및 유기질 비료 투입량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제초제 사용보다는 오리농법이 상대적으로 오염을 줄일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기질비료의 적정사용과 사용 시기를 세밀하게 관리함으로써 기술이 정밀하게 발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서 오는 논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유기농업을 실천함으로써 토양 속에 이산화탄소를 저장하여 온난화를 막을 수 있고 수질 또한 개선된 연구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유기농업의 환경개선 효과, 환경복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연구, 구체적인 실천 활동, 정책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생명을 기르는 농업,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는 농업으로서 유기농업의 의미를 추상적인 수준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 공감하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유기농업 관련 정책은 직접지불제도의 기간 확대,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상호준수제도를 도입하여 유기농업 실천에 대한 신뢰와 함께 환경정책으로서 유기농업 육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종숙, 한국친환경도작의 현황과 과제, 일본유기농업연구연보4권, 2004.12
- 김종숙, 한국생명농업운동의 전개과정과 발전과제, 2005 대안농업지구포럼 한국준비위원회, 2005.4
- 정은미, 한국의 친환경농업정책의 전개와 의의, 농림업문제연구, 2005.9,
- 김창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개편 및 환경기준 준수조건 지원정책 도입방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최근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속보 58권, 2009.9.4
- 농림부,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06-10)계획, 2005.
- 농림수산식품부, 유기농식품산업 육성 방안, 2010.4
- 전라남도, 생명식품산업육성 제2차5개년계획, 2009.
- 김종숙,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유기농업의 발전방향, 제1회 생물다양성을 기르는 농업국제회의, 2010